

제 4 장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이 관건

경제 분야 여론분석

이근*·정원철**

1. 들어가며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표어를 강조하였고, 새 정부의 이름도 ‘참여정부’로 지어 국정 수행에 국민의 참여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경제 분야는 특히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침예하게 영향을 받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다수를 만족시키면서, 또한 어떻게 국민경제 전체의 국제경쟁력과 성장을 유지할 것인가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 하겠다. 지난 대선 때부터 부각된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설정 문제는 바로 이러한 과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유가급등 등 최근의 상황전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가령 지난 2월 3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경제는 자아도취(*complacency*) 망령에 또 다시 직면했다”라는 기사를 소개한 바 있다. 우리 경제가 경제편더멘털을 과신하고 있었다는 징후가 도처에서 감지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경제는 고유가, 무역수지 악화, 단기채무 증가 등의 부정적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취임 직후부터 재벌개혁 지속 및 공정거래 확립을 경제정책의 중추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정책수립에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적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이슈투데이》 언론출판 팀장.

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 더 나아가 오피니언 리더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공표된 정책과 여론 사이에는 어떠한 합일점이 있고 차이점이 존재하는가가 역시 하나의 준거틀이 될 것이다. 만일 그 사이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를 진단하는 것은 다음 5년 동안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일종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이런 인식에서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참여정부의 향후 5년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어지는 절에서는 지난 5년 동안의 국민의 정부 경제 성적을 평가하고, 향후 5년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제시한다. 3절, 4절, 5절 등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성장과 분배 균형 문제 등), 재벌개혁, 세제 등 각종 규제관련 쟁점, 노동 분야 쟁점 및 일어날 변화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경제공약의 현실성과 실천전략, 개혁의 수혜집단 및 협력집단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설문분석에서는 같은 문항에 대한 일반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응답에 대한 비교분석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외 연령별, 직업별, 지지 성향 및 이념성향별 차이분석과 그 해석에도 일정한 비중을 두어 설명하고자 했다.

2. 과거 5년 경제 성적 평가와 향후 5년 경제 전망

우선, 지난 김대중 정부 집권 5년간의 경제 성적 평가와 향후 5년 기간 동안의 경제 전망에 관한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지난 5년간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 가운데 2.5%만이 “매우 나아졌다”, 32.2%는 “대체로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53.1%가 “대체로 나빠졌다”, 12.3%는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즉, 설문 응답자의 34.7%가 긍정적 평가를, 65.3%는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모두 불황인 가운데 한국과 중국만이 높은 경제 성적을 실현하였고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는 해외로부터의 평가와 상당히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향후 5년간 한국경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는 긍정적 시각이 많았다. 우선 “매우 나아질 것이다”와 “대체로 나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7.8%와 75.9%로 나타난 반면, “대체로 나빠질 것이다”와 “매우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각각 15.8%와 0.4%였다.¹⁾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안정적 경제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이유가 27.2%, “정치개혁으로 정경유착이 줄어들 것이다”가 22.3%, “재벌개혁으로 인한 투명한 경제가 실현될 것이다”에 21.1%의 응답률이 나타났다. “노사관계 안정”을 꼽은 응답률이 12.0%, “남북관계 안정으로 인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늘 것”이라는 이유가 10.1%였다. 반면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는 7.2%에 불과했다.

부정적 전망에 대한 근거로는 우선 외생변수라 할 수 있는 “국제 경제환경 악화”를 꼽은 응답비율이 23.6%로 나타났다. 그리고 “늘어나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19.5%, “재벌개혁으로 기업환경 악화”가 15.9%로 조사되었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 증가”라는 우려와 “분배정책으로 성장 잠재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 모두 14.4%였다. “경제에 대한 규제 증가를 우려하는 의견”도 12.3%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전망의 근거로는 개혁에 따른 경제체질 개선, 정경유착 근절, 투명성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반면에, 부정적 전망의 근거 역시 이러한 개혁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 많아 개혁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표 4-1〉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경제 개선 정도

구 분	매우 나아질 것이다	대체로 나아질 것이다	대체로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	7.8	75.9	15.8	0.4

〈표 4-2〉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긍·부정 전망 이유

긍정 전망 이유	%	부정 전망 이유	%
안정적 경제성장 기반 확충	27.2	국제 경제환경 악화	23.6
정치개혁으로 정경유착 감소	22.3	노동자들의 요구 증가	19.5
재벌개혁으로 투명한 경제 실현	21.1	재벌개혁에 따른 기업환경 악화	15.9
노사관계 안정	12.0	북한에 대한 퍼주기 증가	14.4
남북 긴장완화에 따른 외국투자 증가	10.1	분배정책에 따른 성장 잠재력 감소	14.4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빈부격차 축소	7.2	경제에 대한 규제 증가	12.3
무응답	0.1	무응답	0.0

1) 노무현 정부의 최우선 추진 국정과제에는 설문 응답자의 56.4%가 경제를, 19.5%가 정치·행정을, 노동·복지가 9.9% 등으로 조사되어,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론은 새 정부가 개혁의 수행에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길 바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1>, <표 4-2>와 같다.

<표 4-3>에서 집단별 성향을 분석해보면, 우선 과거 5년간의 한국경제의 성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역시 향후 5년을 낙관하는 경향이 강했다.²⁾ 이런 응답자별 선호 성향을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표 4-3>에서 가장 긍정적 응답 집단이란 가령, 김대중 정부 경제평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 응답(매우 나아졌다와 대체로 나아졌다의 합)을 한 비율이 어떤 집단의 경우 제일 높은가를 나타낸다. 김대중 정부하의 경제 성적에 대한 가장 긍정적 평가를 한 집단은 20대, 농업, 중졸 이하층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장 부정적 응답 집단은 부정적 응답(대체로 나빠졌다와 매우 나빠졌다의 합)을 한 비율이 어떤 집단이 제일 높은가를 나타낸다.

<표 4-3> 집단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경제 분야 평가와 전망 차이

단위 : %

구 분	김대중 정부 한국경제 평가(A)		노무현 정부 한국경제 전망(B)		(B) - (A)	
	가장 긍정적 응답 집단	가장 부정적 응답 집단	가장 긍정적 응답 집단	가장 부정적 응답 집단	가장 긍정적 응답 집단간	가장 부정적 응답 집단간
연 령	20대/42.1	40대/71.4	20대/86.3	50대↑/17.4	+44.2	-54.0
직 업	농업 등/58.0	자영업/77.3	블루칼라/88.3	자영업/20.5	+30.3	-56.8
교육수준	중졸↓/37.4	고졸/66.5	고졸/86.9	대졸↑/21.5	+49.5	-45.0
가구소득	200만↓/37.1	300만↑/68.6	200~300만/84.5	300만↑/18.3	+47.4	-50.3
거주지	호남/58.8	대구경북/77.8	호남/95.6	부산경남/23.3	+36.8	-54.5
출신지	호남/47.6	서울/73.7*	호남/94.8	대구경북/23.8	+47.2	-49.9
이념성향	진보/36.0	보수/72.8	진보/87.7	보수/22.1	+51.7	-50.7
대선지지	노무현/41.8	이회창/73.1	노무현/94.9	이회창/31.5	+53.1	-41.6
지지정당	민주/45.0	한나라/77.2	민주당/94.2	한나라/32.0	+49.2	-45.2

주1 : (A)와 (B)에서 가장 긍정적 응답 집단과 가장 부정적 응답 집단은 각각의 설문 응답자 집단별 최고 점수 획득 집단을 나타냄.

주2 : *는 서울에 비해 제주/이북/해외의 응답비율이 87.0으로 가장 높았으나 응답자 수가 23명으로(비율 1.9%) 낮아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서울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2) 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에서 접근 유의확률 값 $p < 0.01$ 로 나오므로써 독립변수인 김대중 정부 한국경제 평가와 종속변수인 노무현 정부 한국경제 전망 사이에 영가설은 기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하의 경제에 대해 모두 긍정적 평가를 한 연령 집단은 20대이다. 20대는 자신들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말한 집단이다.³⁾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최대 지지계층이 20대였다는 점⁴⁾을 고려해 본다면 20대의 노무현 지지경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모두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 직업군이 자영업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과거 수 년 동안 과세특례 폐지 등의 조세 부담이 가중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대기업에 비해 경기 악화에 대한 피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고 그 대비책도 약한 자영업자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 대해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의 출신지가 서울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자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학력이 높고, 경제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층일 수록 표면적 경제개혁의 성과보다는 개혁의 미진한 점, 개혁의 부작용(예, 소득 불평 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 향후 경제 분야 중점과제와 정책의 방향: 성장 대 분배

노무현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4-4>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빈부격차 축소”(29.6%)와 고용안정(26.3%)이 근소한 차이로 1위, 2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동산가격 안정”(16.0%)이 3위였고, 그 외에 “재벌개혁”(11.5%), “농업 구조조정”(6.4%), “공기업 민영화”(5.1%) 순이었다. 반면, “복지 확대”나 “물가 안정”이라는 응답은 각각 4.8%와 0.3%에 머물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이러한 결과는 노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들⁵⁾과 일단은 어느 정도 상응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이슈투데이와 공동으

3) 이번 설문결과에서 30대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평균 4.86, 40대는 4.88, 50대 이상은 5.56이라고 답했으면 20대는 평균 4.43이라고 답함으로써 가장 진보적 연령대로 조사되었다(진보:0~4, 중도:5, 보수:6~10).

4) 지난 대선에서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유권자의 62.1%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노 후보의 당선에 전인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 분야 공약은 <부록>을 통해 요약·정리하였다.

로 소속 전문가 집단 2,000여 명을 모집단으로 실시한 2002년 11월의 설문조사에서 소득분배체계 개선이 24.9%, 금융 분야 구조조정 지속이 19.8%, 지속적 경제성장 정책 추진이 15.0%, 각종 규제완화가 9.6% 등으로 조사된 바 있다(이내영·이근·정원철, 2003).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이나 전문가 집단 모두, 노무현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로 크게 분배와 성장을 모두 중시하되 분배 쪽에 약간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선호도를 <표 4-5> 및 설문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가지고 좀더 분석해보자. 이는 빈부격차 해소를 분배의 중시로, 고용안정은 성장의 중시로 해석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용안정 즉, 성장을 중시하는 집단이 젊은 20대, 고소득층, 상대적 보수층임을 보여준다. 반면에 분배를 중시하는 층은 30대, 40대, 저소득층, 상대적 진보층임을 드러낸다. 재미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지지연령층인 20대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점에서는 노무현에 대한 지지계층이 아닌 보수층의 선호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비슷한 현상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 20대와 고소득층, 이념적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집단들이 오히려 민영화에 대해 적극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표 4-4> 노무현 정부 최우선 추진 경제과제

구 분	빈부격차 해소	고용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	재벌 개혁	농업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복지 확대	물가 안정	계
순 위	1	2	3	4	5	6	7	8	
응답률(%)	29.6	26.3	16.0	11.5	6.4	5.1	4.8	0.4	100.0

<표 4-5> 분배와 성장에 대한 집단별 선호도

단위 : %

구 분	빈부격차 해소		고용안정		공기업 민영화	
	가장 상위 응답 집단	가장 하위 응답 집단	가장 상위 응답 집단	가장 하위 응답 집단	가장 상위 응답 집단	가장 하위 응답 집단
연령별	30대/33.7	20대/26.4	20대/29.8	50대/22.3	20대/6.2	30대/4.0
가구소득	200만↓/31.0	300만↑/27.9	300만↑/31.1	200만↓/22.9	300만↑/3.6	200~300만/3.6
이념성향	중도/31.7	보수/28.3	중도/28.3	진보/23.52	진보/6.6	보수/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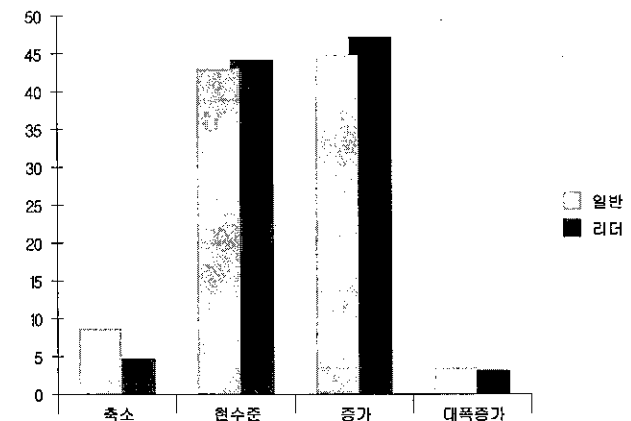
주 : 이 표는 해당 설문에 응답한 설문 참여자만을 연령별, 가구소득, 이념성향에 따라 정리한 것임. 가장 상위 응답 집단은 응답자 집단 가운데서 가장 높은 응답을 한 집단을, 가장 하위 응답 집단은 그 반대의 경우를 나타냄.

이는 결과적으로 노 당선자의 경제 분야 과제 추진에서의 지지계층에 대한 파악을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20대가 노 당선자의 당선에 기여하고 높은 호감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배보다는 성장, 그리고 민영화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방향 선택의 딜레마를 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향후 경제 분야 과제를 추진함에 이들을 여론 파악의 준거집단으로 삼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이를 뒤집어 보면 미래 한국 사회의 주역인 20대와 현재 한국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고소득층의 지향치가 비슷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그 중간층인 30대와 40대가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스스로 방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장과 분배 사이의 선택에 대한 추가 질문을 일반인들과 오피니언 리더 모두에게 해보았다. 즉, “노무현 정부가 경제성장과 복지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수준 유지”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집단 모두에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나왔다(<그림 4-1> 참조). 이는 대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약간 더 늘면 각자에게 더 혜택이 돌아올 것 같다는 희망적 바람이 사회 전반에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노무현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제 분야 과제에서 “복지 확대”의 응답률이 4.8%에 머물렀고, 그리고 관련 질문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부각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복지의 중요성은 공감하나 이는 다른 과제와의 중요도 비교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며, 대신 고용과 성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을 여론조사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이는 다른 과제와의 중요도

<그림 4-1> 복지예산 수준 설문 결과



비교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며, 대신 고용과 성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을 여론조사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공약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일반인들에게 물어보았다. 이는 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 분야 공약 사항만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일단 응답자들은 “일자리 250만 개 창출”을 27.3%, “서민금융 활성화”를 24.1%, “경제 7% 성장”을 21.6%로 꼽았다. 즉, 여기서도 고용확대와 성장이 중시되었다. 일반인들은 이들 세 개 공약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재벌개혁”은 13.7%, “주택보급 확대”는 11.8%,

〈표 4-6〉 집단별 우선 실시 경제공약 선호도 비교

단위 : %

구 분			일자리 250만 개 창출	서민금융 활성화	경제 7% 성장	재벌개혁
일반 전체			27.3	24.1	21.6	13.7
리더 전체			41.0	12.7	24.8	16.2
일반 전체-리더 전체			-13.7	11.4	-3.2	-2.5
연 령	일 반	20대	27.7	24.3	18.8	15.4
		30대	22.8	23.1	20.1	16.8
		40대	28.6	24.7	22.7	12.9
		50대 이상	30.6	24.3	24.3	10.0
	리 더	30대 이하	35.7	7.1	17.9	32.1
		40대	34.5	10.1	26.6	22.2
		50대	47.2	16.7	23.1	6.5
		60대 이상	46.9	14.1	26.6	12.5
이념성향	일 반	진 보	27.0	21.8	18.6	16.7
		중 도	30.7	20.6	24.5	11.3
		보 수	23.7	30.4	21.7	9.6
	리 더	진 보	37.3	11.3	19.0	24.6
		중 도	39.2	13.3	34.2	11.7
		보 수	50.7	14.7	21.3	6.7
대선지지	일 반	노무현	27.9	21.1	20.6	16.5
		이회창	28.2	25.7	22.7	10.2
	리 더	노무현	30.1	10.6	11.0	31.7
		이회창	47.4	14.9	19.9	3.9

주 : 리더는 오피니언 리더를 가리킴. 대선 지지에 대한 응답자별 분포는 노무현, 이회창만을 비교한 것임.

“고속철도망 확충”은 1.7%로 나타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시급성에서 후순위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전문가들은 “일자리 250만 개 창출”을 41.0%, “경제 7%성장”을 24.8%로 꼽음으로써 일반인에 비해 보다 성장을 중시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재벌개혁”이 16.2%, “서민금융 활성화”가 12.7%로 나타났으며 “주택보급 확대”, “고속철도망 확충”은 각각 2.7%와 2.4%로 조사되었다. 이들 두 집단간에 존재하는 일부 시각 차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

〈표 4-6〉은 일반인과 리더의 각 응답층을 연령, 이념성향 등으로 구별해서,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4대 경제공약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가를 나타낸다. 〈표 4-6〉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대에서는 재벌개혁과 같은 쟁점 개혁과제에 대해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그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일자리를 늘이고, 서민금융을 활성화 하면서 경제성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성향에 따른 지지공약의 차이는 일반인보다 오피니언 리더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즉,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지도에서 일반인 그룹에서는 이념성향별로 이 항목에 대한 지지도가 별로 달라지지 않는 반면에, 리더 그룹에서는 보수층 리더들이 가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선호도가 50%를 넘고 대신에 재벌개혁에 대한 선호도는 6%에 불과한 현상을 나타냈다. 대선 지지후보별 공약선호도에서도 일반인에 비해 오피니언 리더들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각종 정책 및 규제관련 이슈

1) 고소득자 세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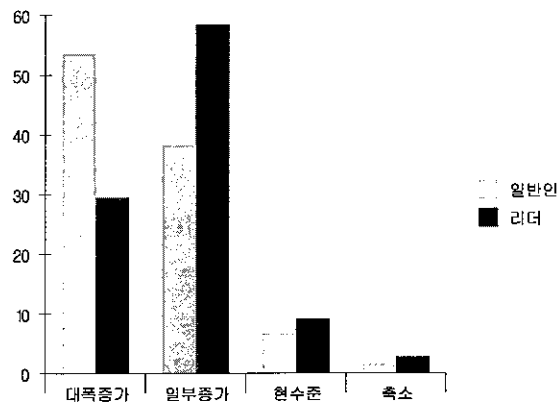
일반인에게 노무현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일단 높았다. 우선 과반수인 53.6%의 응답자들이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해 세금부과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8.3%가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6%, “세금을 낮추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전문가들 역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과를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 대체로 동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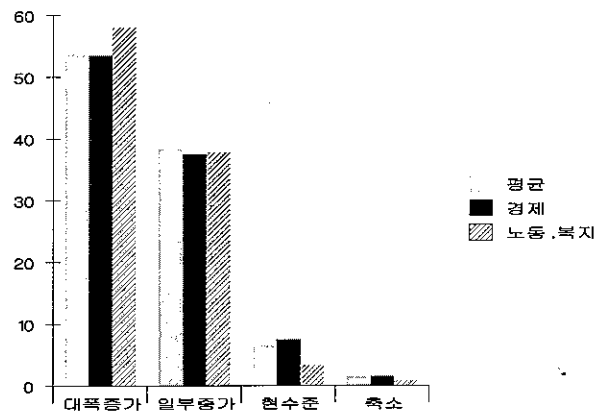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상당히 다른 응답률을 보였다. 우선, “세금부과를 크게 늘려야”에는 29.5%가 응답한 반면,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에 과반수인 58.4%가 응답함으로써 급격한 세금부과 변화에는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현재 수준 유지”에는 9.1%, “세금을 낮추어야 한다”에는 2.7%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4-2〉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문제에서 세금 증가의 수준을 놓고 일반인과 오피니언 리더 간에 뚜렷한 시각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일반인들은 대폭 증가를,

〈그림 4-2〉 고소득자 세금 증가에 대한 설문 비교 결과



〈그림 4-3〉 고소득자 세금 증가와 노무현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 결과별 비교 결과



주: 응답값(대폭 증가-1, 일부 증가-2, 현수준-3, 축소-4)에 대한 “경제” 응답자들의 응답 평균값은 1.57, 표준편차는 0.697이었으며, “노동·복지”는 평균값이 1.47, 표준편차가 0.608로 나타남. 여기서 표준은 일반인의 설문 결과임.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일부 증가를 선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에는 세금의 불공정한 과세나 특정 계층의 세금 탈루나 포탈이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조세정의의 미흡한 구현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증가 지지라는 설문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런 추론에 대한 근거를 찾고자, 노무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 분야를 경제라고 응답한 경우와 노동·복지라고 응답한 두 집단간에 고소득자 과세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그림 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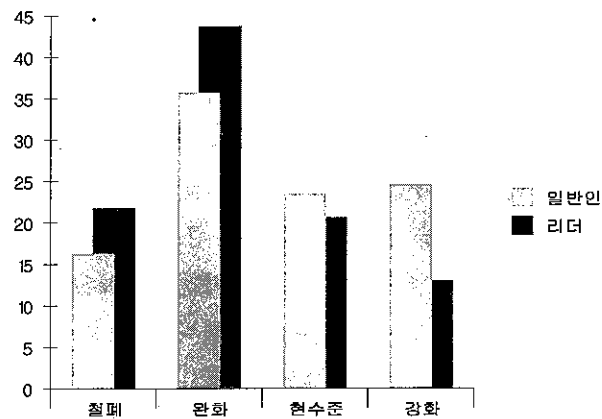
〈그림 4-3〉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노무현 정부의 최우선 추진 국정과제를 경제라고 응답한 사람들과 노동·복지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증가에 긍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각각 91.0%와 95.8%였다. 전체 평균이 91.9%였음을 고려한다면, 고소득자 세금 증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 차이가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이 복지 증진을 지향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곱지 못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나아가 계층간의 갈등이 여전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재벌개혁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의지는 주주 집단소송제 추진에 대한 입장 천명에서 보이듯이 확고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수위 위원들 역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재계와의 갈등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은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있을까? 일단,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불공정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가 35.7%였으며 “재벌개혁은 규제를 완전히 풀고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가 16.3%였다. 반면, “재벌개혁을 위한 규제 골격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4.6%로 조사되었다. 즉, 규제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자 비율 52.0%와 규제강화 필요성을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이 48.0%로 양분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와는 반대로 오피니언 리더들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었다. 즉, “규제 전면 완화”에 21.8%, “불공정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에 43.7%가 응답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설문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띠었다. 그리고 “현행 수준 유지”가 20.6%, “더욱 강화해야 한다”가 13.0%로 나타남으로써 일반인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그림 4-4〉 재벌규제 설문조사 비교 결과



주: 리더는 오피니언 리더를 가리킴. 대선 지지에 대한 응답자별 분포는 노무현, 이회창만을 비교한 것임.

〈표 4-7〉 집단별 재벌관련 규제 설문 비교 결과

단위: %

구 분			철폐	완화	현수준	강화
연령	일반	20대	14.7	33.6	25.7	26.0
		30대	13.9	36.0	22.1	28.1
		40대	22.0	34.9	20.8	22.4
		50대 이상	15.4	37.7	24.9	22.0
	리더	30대 이하	14.3	42.9	25.0	17.9
		40대	18.0	42.4	21.6	16.5
		50대	25.0	45.4	17.6	12.0
		60대 이상	28.1	43.8	21.9	4.7
이념성향	일반	진보	15.0	34.6	22.3	28.2
		중도	17.5	34.5	23.0	24.9
		보수	16.3	38.1	25.3	20.3
	리더	진보	23.2	38.0	21.1	16.9
		중도	18.3	48.3	20.0	12.5
		보수	24.0	48.0	20.0	6.7
대선지지	일반	노무현	16.2	34.4	23.8	25.7
		이회창	18.3	35.6	25.0	21.1
	리더	노무현	13.8	36.6	30.9	17.9
		이회창	26.6	53.9	10.4	8.4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집단간 응답률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4〉와 같다.

대체적으로 재벌에 대한 규제는 완화 쪽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피니언 리더층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연령, 이념성향 및 16대 대선에서 지지한 후보별로 응답률을 상세 분석해보자. 이는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인과 오피니언 리더 모두 재벌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의견은 설문 참여 집단간 구분에 따른 차이가 일정 정도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에서는 30대 이하, 이념성향 진보, 대선 지지 노무현이라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의 유지 내지는 강화를 선호한 반면, 40대 이상, 이념성향 보수, 대선 지지 이회창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규제의 완화에 비중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와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노무현 정부로서는 의제설정과 정책결정 과정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벌개혁에 대한 시각 차이가 위에서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의 대표적 두 집단으로 명확히 갈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가령, 성장에 대한 입장에서 20대 젊은 층과 보수 및 고소득층이 같은 입장으로 보인 것과 같이 선호층이 섞이는 데 반해,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섞이지 않고 뚜렷이 양분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사회갈등의 잠재적 요인으로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어 얹힌 실타래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운영의 묘가 노무현 정부에 절실하다.

3) 노동 분야 쟁점사항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주5일근무제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 일반인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우선, “주5일근무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39.5%가 “경제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여건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며, 27.3%는 “대기업에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신중한 입장이 과반수를 넘었다.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9.3%로 나타났으며, “소득감소나 휴일감소 없이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23.9%로 나타났다. 〈표 4-8〉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20대가 가장 적극적 지지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가에 대한 20대의 강한 선호와도 관련이 있어보인다. 반면에 이제 한국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어느 정도 느끼기 시작하는 30대는 40대와 유사하게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응답에서는 주5일근무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응답자들의 결과가 다른 직업 응답자들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표 4-8〉 주 5일근무제 실시관련 설문 결과

단위 : %

구 분		전면 실시	순차 시행	여건에 따른 점진 실시	노사 자율 결정
전 체		23.9	27.3	39.5	9.3
연령대	20대	30.8	40.8	28.8	9.6
	30대	25.1	27.1	37.3	10.6
	40대	22.7	23.9	44.3	9.0
	50대 이상	18.0	27.1	46.9	8.0
직업별	농어업	24.0	20.0	40.0	16.0
	자영업	15.7	26.2	49.3	8.7
	블루칼라	23.9	27.8	38.5	9.8
	화이트칼라	35.5	26.6	31.4	6.6
	가정주부	16.2	31.4	43.2	9.2
	학생	33.3	25.4	8.6	12.7
	무직	31.3	18.6	35.4	14.6
이념성향	진보	27.2	28.2	35.3	9.3
	중도	25.2	23.3	42.2	9.4
	보수	18.9	30.9	41.1	9.1

〈표 4-9〉 비정규직 문제관련 설문 결과

단위 : %

구 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처우를 크게 개선해야	처우를 개선해야	개별 사업장 자율에 맡겨야
전 체		22.3	39.3	31.0	7.5
연령대	20대	24.3	46.6	24.0	5.1
	30대	20.5	36.0	38.6	5.0
	40대	23.1	36.9	33.3	6.7
	50대 이상	21.4	37.7	28.6	12.3
직업별	농어업	24.0	28.0	36.0	12.0
	자영업	17.9	39.3	34.5	8.3
	블루칼라	26.3	35.6	32.2	5.9
	화이트칼라	25.5	43.4	25.5	5.5
	가정주부	19.4	37.8	34.3	8.6
	학생	22.2	42.9	25.4	9.5
	무직	22.9	45.8	22.9	8.3
이념성향	진보	20.8	36.8	36.0	6.4
	중도	25.2	38.1	30.2	6.5
	보수	20.5	43.2	26.4	9.9

이념 성향 역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도 노동계의 화두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에서도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처우를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39.3%로 나타났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22.3%로 나타남으로써 우리 사회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1.0%였고, “개별 사업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7.5%로 나타남으로써 다소 신중한 접근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응답자도 많았다. 결과적으로 최근 불안한 경기를 일반 국민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노무현 당선자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의 추이와 정책결정 비용과 집행 비용을 감안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9〉와 같다. 〈표 4-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표 4-8〉에서 나타난 설문결과 흐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자유무역지대

이미 우리나라는 칠레와 자유무역지대(FTA)를 체결한 바 있다. 자유 무역지대 설치가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는 다차원적 진단과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블락화와 각종 무역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모색과 검토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자유무역지대를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가를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중국’이 68.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일본’은 각각 12.9%와 11.2%에 머물렀다. 기타 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은 모두 0.1%의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는 중국과 경제적 협력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여론의 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경제공약 실현가능성과 실천전략

노무현 당선자는 2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며, 산업 전반에 경쟁력 제고를 이루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공약 사항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약 모

두가 실천될지에 대한 신뢰도와 유권자가 투표행위를 할 때 선호 후보에 대한 지지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대선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자. 일단 노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 가운데 실현성이 낮은 공약의 유무 정도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매우 많다”가 11.3%,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가 73.8%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없는 편이다”는 14.2%, “전혀 없다”는 0.7%로 조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상당수가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약간의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별다르게 놀라운 일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았다. 즉, 공약을 철회할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이는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공약철회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있다”가 77.1%로 나타남으로써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의 20.3%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이로써 일반인들은 공약 이행여부에 대해 관대함 내지는 일정 정도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피니언 리더들 역시, 전반적 결과는 유사한 양상이었다. “수긍할 수 있다”가 86.1%,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가 12.4%로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더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공약에 대해 실용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선거철에 약간의 인기성 공약이 나오는 것을 인정하여, 이제 집권하였으니 그에 구속받지 말고 현실성 있고 효과가 큰 것들을 가려서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현실감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잘할 것 같은 분야와 못할 것 같은 분야를 7대 분야 중 선택하게 하였다. 경제 분야는 응답자의 9.3%만이 잘할 것 같은 분야로 선택해 3위에 머물렀다. 또한 경제 분야는 못할 것 같은 분야에서는 18.1%, 2위로 조사됨으로써 새 정부하의 경제 전망을 밝게 평가한 설문결과와 일견 모순되었다.⁶⁾ 노 대통령이 잘할 것 같은 분야 1위는 노동복지(46.0%), 2위는 정치행정(31.1%) 등이었고, 못할 것 같은 분야 1위는 통일외교(31.1%), 2위가 경제, 3위가 과학기술이었다. 이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경제 전망을 회망적이라고 응답한 대다수의 설문 참여자들은 단순히 경제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반영한 것이고, 실제로는 노 당선자의 경제 분야 국정능력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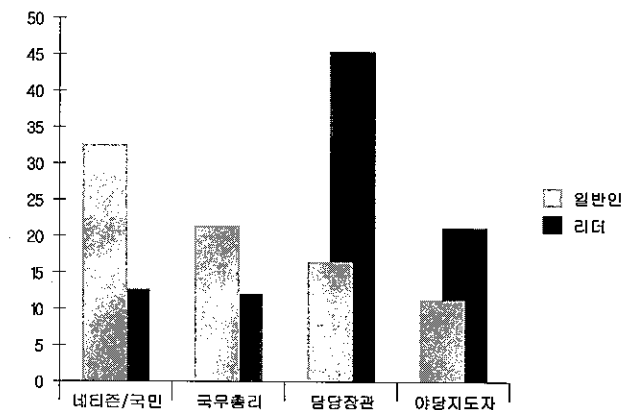
6) 참고로 2002년 11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이슈투데이와 공동으로 이와 유사한 문항을 가지고 전문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 분야 평점은 기타 9개 분야 단순평균 점수인 61.1점에 못 미치는 59.3점을, 분야별 1위 평가빈도에서는 9개 분야 단순평균 57.5%에 크게 모자라는 47.8%를 받은 바 있다.

6. 참여정부 수혜집단과 협력집단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집단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노동자와 농민”일 것이라는 응답이 50.3%, “중소기업”은 19.3%, “시민운동가”와 “대기업”은 각각 11.8%와 5.8%로 나타났다. 즉, 그동안의 소외계층인 노동자, 농민이 최대 수혜집단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응답자를 연령별로, 소득별로, 지지성향 등 어떤 그룹으로 분리해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정부가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집단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그 결과 “네티즌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32.6%, “국무총리”가 21.5%, “담당 장관”이 16.5%, “야당 지도자”가 11.3% 등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들의 경우, “담당 장관”이 45.4%, “야당 지도자”가 21.2%, “네티즌을 포함한 일반 국민”은 12.7%, “국무총리”가 12.1% 등으로 나타나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비교 정리하면 <그림 4-5>와 같은데 일반인과 오피니언 리더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즉, 일반인들의 경우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위력을 실감하였던 네티즌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압도적 비중을 두어 참여정부라는 정권의 이름과 어울리게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중시한 반면, 오피니언 리더들은 담당 장관의 역할에 높은 비중을 두어 대중인기영합주의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이는 참여정부가 이 두 상반된 시각에 대해 어떻게 균형감 있게 처신할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가령, 초기에 장관 추천을 인터넷으로 받자 네

<그림 4-5> 국정협의 파트너 설문 비교 결과



주: 리더는 오피니언 리더임

티즌들이 의견을 인터넷상에 올렸지만, 막상 인선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후 판단이 많다는 것은 국민 참여의 효과적 방법과 영역이 무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 참여는 하나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실망을 한 편에게 줄 수 있고, 다른 편에게는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의 구실이 될 수 있다.

7. 요약과 결론

이상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경제 분야와 관련한 일반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설문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이하에서는 여기서 드러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 5년간에 한국경제의 성적이 국제적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일반적 평가가 국내에서 낮고 외국에서 높은 것파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국민들이 긍정적 측면보다 개혁의 미진한 점, 부작용 등을 여전히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 부작용 중의 하나가 소득분배 악화인데, 이는 새 정부의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서 분배 개선이 부각된 것파도 연관지어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노무현 정부가 책임질 향후 5년간의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적 의견이 많았으나 노무현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능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 낙관적 전망은 일종의 희망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성장과 복지라는 두 축이 경제 분야 중점 과제로 부각되었고 상대적으로 분배 쪽이 더 큰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중점을 둘 공약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 성장관련 공약이 부각되어 이 두 마리 토끼간의 균형 달성이 관건임을 시사한다.

넷째,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20대 등 젊은 층과 비판적이었던 고소득 층이 똑같이 성장정책을 분배나 복지에 비해 선호하고, 민영화 등에 대해서도 적극 긍정한 반면에 그 중간층인 40대는 성장과 분배 사이에 확실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의 주역인 젊은 세대와 현재의 기득권층 간에 국가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괴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일반인과 오피니언 리더 간에 시각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이슈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와 참여정부의 협력 파트너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리더들은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새 정부의 협력 파트너로서 네티즌보다는 담당 장관층을 지목하였다. 참여정부라는 정권의 이름과 어울리게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중시한 반면, 오피니언 리더들은 담당 장관의 역할에 높은 비중을 두어 대중인기영합주의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사실 재벌개혁의 강도도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민감함을 인식할 때, 새 정부 정책이 국민 참여라는 명분과 인기영합주의라는 부작용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감 있게 처신할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가령, 초기에 장관 추천을 인터넷으로 받자 네티즌들이 의견을 인터넷상에 올렸지만, 막상 인선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후 판단이 많다는 것은 국민 참여의 효과적 방법과 영역이 무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 참여는 하나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실망을 한 편에게 줄 수 있고, 다른 편에게는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의 구실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일반인이나 리더들이나 모두 현 정부의 공약 중 실현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음을 인정한 반면 이런 공약들의 철회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약에 대해 실용적 입장을 보였다. 즉, 선거철의 인기성 공약에 구속받지 말고, 현실성 있고 중요한 과제들을 가려서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현실적 바람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경제라는 것이 그리고 경제환경이 매우 가변적이기에 이 결과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론이 이러하며 그것이 여론으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반 국민과 여론 주도층간의 차이, 연령별 차이, 직업별 차이, 이념별 차이 등에 대한 인식과 그 차이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살피는 일은 의미가 크다.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국민 통합과 경제개혁을 일궈낼지 평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균형감과 추진력을 보여줄지도 아직 알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5년 후에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청와대 문을 나설 수 있게 되는 데 본 연구결과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2001). <한국인의 삶의 질 조사 자료집>.
 김재한(1999). "한국의 이념성향과 선거정치",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푸른길.
 이준한(2003). "제 16대 대선의 주요쟁점과 유권자의 선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세

미나 발표 논문.

이내영·이근·정원철(2003). 《2002대선 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 이슈투데이.

Ambrason, Paul R., John H. Aldrich, and David, W. Rohde(1999).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1996 and 1998 Elections*. Washington D.C.: CQ Press.

부 록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2월 21일 3대 국정목표(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와 12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경제관련 분야의 국정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규제 전반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여부 검토, 수도권 정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단계적 전환, 환경친화적 기업에 대해 배출부담금 감면, 각종 보고와 검사 의무 면제,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정비, 지방대학 특성화와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cluster) 육성.

(2)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추진, 금융회사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추진,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 유지,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공개, 서민층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제 도입 검토, 공정위 일부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 방안 검토, 공정위 전속 고발제도 보완.

(3)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제도 강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 단계적 축소, 금융감독과 검사 강화, 대주주와 계열사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결의 의무화 확대, 비상장 금융사에 대한 감독 강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상장·등록기업의 회계 및 공시제도 개선,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 개인워크아웃제도 활성화, 우체국 금융제도 개편,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중복·분산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한국은행 독립성 제고, 물가관리 목표를 연간목표에서 중기목표로 전환, 다원화되어 있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4) 재정·세제 개혁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처 자율과 책임 확대,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최저가 낙찰제 단계적 확대, 중기 재정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공적 연금체계 개선, 비과세·감면 개선, 관세경감제도 정비, 상속·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 규정 신설,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칭) 시행,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2)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인천지역은 물류와 IT 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

(2)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네트워크 외부성의 제공을 통해 추진, 기업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 금융·외환시장을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 2007년까지 OECD 수준으로 금융관련 제도 선진화,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및 금융센터준비위원회 설치, 주요국과의 국제금융 협력을 강화해 시장의 안정성 유지.

(3)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 공항과 항만으로 개발, 화물터미널 및 활주로 확장, 제2연륙교와 공항철도 확충 등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 경의선 동해선 연결 및 대륙철도(TSR, TCR) 교통망 구축, 2015년까지 공항-항만 등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4) IT 등 첨단 산업-비즈니스 허브화

인천-수원간 첨단산업벨트를 R&BD(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지화, 부산-경남 가야벨리를 동북아의 부품 소재 공급기지로 육성, 정부차원의 외국인 투자자문위원회(FIAC) 신설, 한중일 FTA 체결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동북아 에너지 안정공급체계 강화를 위한 '에너지협력체' 구축,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아시아의 관광 중심국으로 도약.

(5) 남북경제교류 협력 촉진 및 대외환경 조성

경협 거점 개발 및 남북간 산업 물류 정보통신축 형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 남북간 제도적 인프라 확충,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한상 네트워크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추진.

3)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등 제한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를 ILO 권고, 외국입법례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권중재 회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직권중재제도 개선.

(2)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의 기초 아래 중층적 협의-교섭구조 확산, 의사결정 단계의 간소화 등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합의사항 이행구조를 정립하는 등 노사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지역 업종 산업별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중위적 수준의 사회적 협의체제 구축, 기업별 교섭을 전제한 노동관계법을 정비하고 여건이 마련된 공공-민간부문부터 업종 산업별 교섭을 점차적으로 유도.

(3)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노사자치주의 원칙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 최소화하고 노사분규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 확립, 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강구,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자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공공부

문의 노사관계 실현.

(4) 근로생활의 질 향상

국회에 계류중인 주 5일근무제 법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여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노동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수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임,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노후 소득 보장기능 강화.

(5) 노동행정 서비스의 역량 확충

노동위원회의 조직 인력을 확충해 공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사적 조정기능 활성화, 근로감독관 증원 및 전문성 보강, 노동정책과정에 노사단체 및 공익인사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는 등 노동행정에의 민간참여 확대.

(6)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생산성 고임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진입 어려운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환경·교육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매년 5만~10만 개 창출.